행불자 어디로…"전교사 인근 암매장" 가능성

드러난 헬기사격 5·18 진실 밝히자

□ 암매장 제보지 발굴을

"새벽 2~4시쯤 됐을 겁니다. 송정리에 서 경운기를 고치고 다리 건너 광주천을 따라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라이트도 켜지 않은 군용 트럭이 도로에서 광주천 아래로 달려가는 거예요. 포크레인이 땅을 팠고 툭, 툭 뭔가 쏟아지는 소리도 들었습니 다."

441명의 행방불명자(광주시는 81명만 인정)는 어디로 갔나. 5·18 당시 행방불명 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묻혀있나.

지난 1980년 5월 21일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명령자와 함께 37년 간 풀리지 않은 5·18 핵심 의혹이 바로 '행 불자와 암매장지' 문제다. 행불자의 경우 5.18 당시 행방불명 내지 불법 연행·구금 됐다가 되돌아온 사례는 연행·구금자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결국 행불자는 암매장 지 문제로 귀결된다.

이와 관련해 "5·18 당시 전투교육사령 부(상무대) 인근 광주천변이 희생자들의 암매장지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환(59·익산시)씨는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나는 라이트를 켜지 않은 군용 트럭과 천변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포크레인을 봤고, 아버지는 군인들을 보 셨다"면서 "아버지가 입단속 하셔서 한참 동안 어디에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 다. 그는 "아버지나 나나 시신을 직접 목 격하지는 못했다"면서도 "라이트도 켜지 않은 군용 트럭, 무언가 파고 있었던 포크

"라이트 안 켠 군용트럭과 땅 파는 포크레인 봤다" 제보 광주시 발굴 여부 수년째 검토 행불자 441명 원혼 달래줘야

레인들, 툭툭 떨어지는 소리에 미뤄 아버 지와 나는 '이놈들이 시신을 파묻고 있구 나'라고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22일 현재 5·18 암매장지와 관련해 총 67건의 제보를 받았다. 이 가운 데 중복된 12곳, 신고 부실한 45곳은 조사 하지 않았으며 9곳은 발굴했으나 5·18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추정 제보지 1 ■ 암매장 제보 위치도



곳은 김씨가 암매장지로 제보한 것으로, 광주시는 현재 이곳을 발굴할지 여부를 수년째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제보자 김씨가 정확 한 장소를 지목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1980년 5월 이후 매장지로 제보된 광주천 변 인근 장소에서 통신선 매설 공사 등 여 러 건의 공사가 이뤄졌었는데도 공사 과정 에서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검토 만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러나 "그날 밤을 잊을 수 없 다. 암매장지로 추정되는 장소와 그 이유 등을 주변에 수차례 알리고 도움을 구했 지만 아무도 발굴하려고 하지않는다"면 서 "내 증언을 바탕으로 5·18 당시 억울하 게 돌아가시고 암매장된 희생자들의 한을 달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기가 틀림없다" 김영환(59)씨가 지난 8월 광주일보에 "80년 5월 아버지와 포크레인을 목격한 곳이 이곳"이라며 "라이 트 켜지 않은 군용 트럭, 포크레인 등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암매장지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8개 병원 수사

수사팀 3차례 교체·경찰 징계 놓고 잡음도

광주지역 약품업체에서 리베이트 수 첩을 확보한 경찰이 '의약계 리베이트 수사'(광주일보 1월 20일자 6면)를 본 격화한 가운데 수사팀의 잦은 교체와 수 첩에 거명된 경찰관의 편파 징계 등 잡 음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먼저 익명 제보자가 제기한 광주 S병원에 흘 러들어간 A약품도매상 측 자금 15억원 이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무기명 진정을 바탕 으로 수사에 나선 광주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의 한 팀은 "의심은 가나 결정적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한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을 지휘한 수사과장 (총경)이 A약품도매상 대표와 친구로 확인된 탓에 의혹을 없애기 위해 수사팀 을 광역수사대로 교체해 사실 규명에 나

경찰은 또 A업체에서 확보한 리베이 트 수첩에 거론된 광주 상무지구 소재 W병원을 포함, 광주·전남지역 8개 병 원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도 벌이고 있 다. W병원의 한 원장은 올 초 경찰 수사 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투신자살 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족 측이 문제 제기한 당시 수사(지수대)의 적정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경찰 소환 통보가 있 기 전에 어떠한 압박을, 어떤 경로로 받 고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관련 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특히 무 기명 진정을 넣은 것으로 파악된 또 다 른 약품업체도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수첩에 언급된 5명의 경찰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한 경찰과 지휘 선상에 있는 경찰관

들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국과수 필적

조회 등의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중 1년전 A업체 대표를 만나 식사 를 했던 것으로 파악된 정보과 직원 등 일부 경찰관에 대해선 당사자 소명 후

조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이 연루된 의약계 리베이트 수 사가 본격화되면서 경찰 조직이 크게 술 렁이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수첩에 거 론된 경찰 5명 가운데 1명만이 대기 발 령되는 등 징계가 공평하지 않다는 여론 이 내부에서 일면서다.

지난 12월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수첩 에는 직전까지 광주경찰청 총경으로 재 직했다가 근무지를 옮긴 총경 B씨, 경정 급 수사팀 관계자 C씨, 경위급 경찰관 D 씨, 정보과 직원 E씨 등 경찰관 5명과 복 수의 공무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기발령은 수사 초기 4개월 간 내사를 벌였다가 수사에선 손 뗀 후 A업체 관계자와 1차례 자리를 가진 정 보과 직원에게만 내려졌다. 수사 지휘 선상에 있던 경정-총경급 간부는 모두 제외됐다. 경찰 내부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졌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 다. 15억원 유입 관련 내사 종결 여부, 인 사 평점 부여 등을 둘러싸고 당시 수사 과장(총경)과 지능범죄수사대장(경정) 은 적잖은 마찰을 빚었다.

잦은 수사팀 교체도 지적되고 있다. 지능범죄수사대 내에서 수사팀이 1차례 교체됐다가 광역수사대로 이관됐고, 지 휘 책임자도 광역수사대를 관할하는 형 사과장이 아닌 수사과장이 지휘하고 있 어서다. 형사과장은 "이해 관계자가 있 어 지휘가 적절치 않다"며 수사 지휘를 기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일본 자위대 5·18 때 광주 정보 수집 사실 확인 미국, 신군부 무력 사용 승인·묵인 정황도 담겨

팀 셔록 기자가 기증 '체로키 파일' 내용은

'5·18 민중항쟁 당시 일본 자위대가 광주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했다'는 사실이 미 국 국방부 기밀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미국 이 지난 1980년 5월 전두환 등 신군부의 무 력 사용을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는 것을 시 사하는 백악관 문서도 공개됐다.

22일 미국인 탐사보도 기자 팀 셔록이 광주시에 기증한 문서(일명 체로키 파일) 에서 주요 샘플을 보면, 1980년 5월 "일본 자위대 해군은 한국 서남부지역의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 불행한 땅(한 국)의 불안정화가 일본에 미칠 수많은 위 험인자들"이라고 적혔다.

이 문건은 1980년 5월 당시 자위대 역할 을 다룬 미 태평양 사령부 1급 비밀(Top

Secret) 교신 기록이다. 분량은 20쪽. 수집 방법과 관련해선 "광주 등 한국에 살던 일 본인(상사원 등)들이 자국에 건넨 내용을 취합한 것을 바탕으로 한 정보", "자위대 가 각종 도감청 장비를 통해 입수한 정보", "영해나 한반도에 요원을 투입시켜 파악 한 정보"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지난 1996년 1월 "1980년 5월 일본 측으로부터 입수했다는 '북괴 남침 설'에 대해 동향 분석 결과를 보고 받았느 냐"는 검사 질문에, 정호용 5·18 당시 특 전사령관이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을 감안하면 "신군부 측이 광주 관련 상황 등을 일본 측과 주고 받은 것 아니 냐"는 추론도 나온다.

체로키 파일에는 당시 미국 정부가 전두 환 신군부 세력의 무력 사용을 승인했거 나 최소한 묵인한 정황이 담긴 문서도 포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문서 샘플에는 "최선행 사항은 최소 물리력 사용으로, 향 후 불안 요소 확장을 제거한 한국 당국에 의한 광주의 질서 회복이다"는 내용이 담 겼다. 사실상 미국 정부가 신군부의 무력 사용을 승인 내지 묵인했고, 시민사회가 아닌 당국(군부 등)에 의한 광주 질서 회복 을 바랐다는 것이다.

체로키 파일에는 '미국이 전두환의 합 법성을 인정하기로 한 내용이 담긴' 1980 년 6~9월 미국 대사관의 기밀 전문 등을 포함 총 3800쪽 분량이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측은 "올 봄 문 서 기증자인 팀 셔록 기자가 광주로 건너 오면 함께 문서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시간 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기증받은 문서들 이 5·18 진실규명에 어떤 형식으로든 영 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2심서 27년·17년 선고

'락스 세례' 끝에 7살 신원영 군을 숨지 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계 모와 친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아동 학대 혐의까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에게 20년, 친부 신모(39)씨에게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 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7년과 1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기 며칠 전부 터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데도 아무런 조치 도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넘어 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다를 바가 없 다"며 1심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두 사람이 양육 문제로 다투며 난동 을 부리고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는 장면을 피해자도 지켜보거나 때로는 직접 폭행당했 다"며 1심에서 무죄로 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세살배기 조카 학대 살해 비정한 이모 7년형 선고

세살배기 조카를 학대하고 살해한 20 대 이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 는 살인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 소 된 A(여·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 대한 범죄이며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

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조카가 이모 에 의해 살해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며 "다만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일반인보 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로 조카를 키우면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다가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나주의 한 아파트 에서 조카 B(당시 3세)군를 때리고 머리 를 욕조에 집어넣는 등 학대하다가 살해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왜 난 밥 안줘"…동료 노숙인 침대에 불질러



○…'식당에서 얻어온 밥을 나눠 먹으면서 자 신만 따돌렸다'는 이유

로 동료 노숙인이 누워있던 침대에 불을 놓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 ○…2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나

모(47)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께 동구의 한 다리 밑에서 노숙인 최모(62) 씨가 누워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 오른쪽 발목과 발에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힌

○…나씨는 전날 점심때 최씨가 근처 식당에서 얻어온 밥을 여럿이 나눠 먹으 면서 자신만 따돌린 사실에 앙심을 품고 홧김에 불을 놓았다고 경찰에서 자백했 지만 주거가 일정치 않아 구속됐고, 피 해자 최씨는 치료비가 없어 화상 입은 다리가 괴사 중인 모습으로 발견돼 경찰 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매 각 물 건	감정평가액		
사건번호	물건	소 재 지 및 면 적 [㎡]	용도	최저매각가격	비고
	번호		0 +	[단위:원]	
[대지/임	남야.	/전답]			
2016타경 431		해남군 화산면 연정리 78 165㎡[농지취득	답		일괄매각.제시외
		자격증명요.현황토지경계부분에소유자미상		4,988,700	건물제외.목록2현
	1	의평가외수목소재,맹지]			황대부분도로의부
		동소 102-2 86㎡	답		속토지및구거,지
		동소 312 370㎡[현황전및창고건부지,맹지]	전		적경계모호
	2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1561 2758㎡	답	18,478,600	농지취득자격증명
				18,478,600	요
2016타경 981	1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산3-2 7004㎡[지적	임야	315,180,000	현황일부공유수면
		경계측량요.분묘소재불명]		315,180,000	으로목측됨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산11-15 327㎡	임야	278,877,000	일괄매각.목록2,
2016타경 998	1	동소 2-8 982㎡	전	278,877,000	농지취득자격증명
		동소 2-9 4128㎡	전	1	요
	2	동소 2-14 9749㎡[농지취득자격증명요.제	전	555,693,000	현황컨테이너3동
		시외건물매각제외]		555,693,000	소재
2016타경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17-7 4865㎡[조형미	전	31,096,000	공유자우선매수권
2536	1	의지분331/973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지		31,096,000	행사제한.현황묵
2300		분매각]			전
	1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1240 1841㎡	답		일괄매각.지분매
2016타경 2864		동소 1260-1 1626㎡[현황맹지]	전	7,205,680	각.황광자의지분
		동소 90 1248㎡	답		/15전부.공유자유
		동소 1264-1 1726㎡	전		선매수퀀행사제한
		동소 산130-1 53950㎡[분묘소재,일부포락	임야		. 목록1~4농지취득
		지및도로타인소유제시외축양시설소재]			자격증명요.목록
					현황잡종지

		매 각 물 건	감정평가액					
사건번호	물건	그 수 새 시 및 면 작 [!!!]	용도	최저매각가격	비고			
	번호			[단위:원]				
2016타경 2864	2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산148 7678㎡[황광	임야	7,677,000	공유자우선매수권			
		자의지분1/15전부.지분매각.현황전및도로.		7,677,000	행사제한.농지취			
		타인소유이동식주택,창고,하우스,황칠나무			득자격증명요			
		소재]						
	3	동소 225 1924㎡[황광자의지분1/15전부.지	전	2,307,600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307,600	요.현황전및도로			
2016타경 3041	1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368-4 287㎡	답	13,282,300	일괄매각.제시외			
		동소 산107-3 200㎡[현황맹지]	임야	13,282,300	건물제외.목록1,4			
		동소 산107-4 461㎡[현황맹지]	임야		농지취득자격증명			
		동소 578 780㎡[현황맹지,묵전]	전		요.목록1현황대			
2016타경 3256	1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367 450㎡	창고용지	29,525,000	일괄매각.제시외			
		동소 367-3 695㎡[농지취득자격증명요.현	전	29,525,000	건물제외			
		황창고용지및일부도로]						
2016타경 3447	1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799 2506㎡[제시외	대	50,120,000	현황타인소유의건			
		건물매각제외.일반건축물대장상타인소유의		50,120,000	물2동,비닐하우스			
		주택건물소재불명,타지상의건물일부가본건			1동,각종수목소재			
		에걸쳐소재]						
2016타경	1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450-11 1081㎡[분묘	전	18,377,000	농지취득자격증명			
3799	'	소재.현황맹지]		18,377,000	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37 1층182.31㎡	숙박시설	1,864,918,200	일괄매각.이현태,			
2016EL24		2~5층각299.04㎡ 6층70.98㎡ 84.7㎡[단독		1,864,918,200	이선하로부터금8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22㎡[제시외건물포함]

주택] 7층[기계실,물탱크실] 제시외 주택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 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 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남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대각가역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매각기일 : 2017. 2. 6. [월] 10:00 매각결정기일 : 2017. 2. 13. [월] 14:00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000,000원의유치

권신고있으나성립 여부불명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애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

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하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

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

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 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

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충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강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

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

2017. 1.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사법보좌관 최성관